
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

2025. 4. 9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및 각국의 대응상황 ...	1
II . 우리 산업 · 경제에 미치는 영향	2
III . 향후 정책방향	3
1. 수출기업 피해 지원	3
2.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	4
3. 산업경쟁력 강화	5
4. 국내 생산 · 고용 영향 최소화	6
IV . 주요 산업별 대응방향	7

I.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및 각국의 대응상황

◇ 미국 신정부는 **국내 제조업 육성, 세수 확대, 무역적자 해소 및 공급망 확보** 등을 위해 ① **품목별 관세**, ② **국가별 관세·상호관세**를 부과

① (품목별 관세) 철강·알루미늄 및 자동차·부품에 25% 부과

- (철강·알루미늄) 철강은 일부 국가의 무관세쿼터·할당관세·면제*를 폐지하고 동일하게 과세, 알루미늄은 관세율(기존 10%) 인상

* (쿼터) **한국**(263만톤), 브라질(419만톤), 아르헨티나(18만톤)
(할당관세) EU(330만톤), 일본(125만톤), 영국(50만톤), (면제) 캐나다, 멕시코

- (자동차·부품) 완성차는 4.3일부터 부과, 자동차 부품(엔진, 변속기, 전기부품 등)은 향후 시행시점 추가 발표 예정(5.3일 이전)

* 미국·멕시코·캐나다 무역협정(USMCA)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역내의 부품,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된 차량은 非미국산 부품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

- (반도체·의약품) 25% 검토 중(2.18일), 반도체 곧 발표 예정 언급(4.3일)

② (국가별 관세) 중국, 캐나다·멕시코, 베네수엘라産 석유·가스 수입국에 대한 별도 조치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

- (중국) 기존 관세에 더해 20% + 상호관세 34% 추가 부과

* 미국은 중국이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가 50% 부과 방침 발표

- (캐나다·멕시코) USMCA 충족 품목은 무관세, 미충족 품목에 25% 부과, 향후 펜타닐·불법이민 해소시 12% 상호관세로 인하

- (베네수엘라産) 석유·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*에 25% 추가 부과

* (주요 수입국) 중국, 인도, 스페인, 이탈리아, 쿠바 등

- (상호관세*) 모든 국가에 단일세율 10%를 적용(4.5일)하고, 對美 무역수지 등을 감안해 57개국에 대해 추가로 차등 부과(4.9일)

* 적용예외 : 품목별 관세 적용 품목(철강,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 등), 에너지, 금괴 등

국가별 상호관세율 비교(%)

국가	한국	중국	베트남	독일(EU)	대만	일본
관세율	25	34	46	20	32	24

※ 주요국은 미국 정부와 관세 부과에 대한 **협의를 지속**하는 가운데, **중국·EU·캐나다** 등은 **보복관세** 부과 계획을 발표

- ▶ **(중국)**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% 관세 부과(4.10일), 희토류 수출 통제 실시(4.4일), 미국 16개 군수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
- ▶ **(EU)** 4.9일 표결 결과에 따라 철강 관세에 대한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시행(4.15일~) 및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중
- ▶ **(캐나다)** 미국산 자동차*에 25% 관세부과 발표(4.3일)

* USMCA 미충족 차량 + USMCA 충족 차량 중 미국산 구성분(Component)

Ⅱ. 우리 산업 ·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對美 수출 및 생산감소 우려

-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, 철강 업종 등의 수출 영향이 크고, 가전·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등 해외생산 위축 가능성
- 다만, 對中 고율관세(54%) 등으로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 가능성도 존재

⇒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 추진

주요 연구기관의 산업별 영향분석

산업	對美 수출비중 (24년 기준)	분석 결과
❶ 자동차	49.1%	■ 높은 對美 수출 의존도로 인해 對美 수출 큰 폭 감소 전망(IBK研, SK증권)
❷ 철강	13.1%	■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對美 수출 큰 폭 감소 전망(IBK研, 한신평)
❸ 반도체	7.5%	■ IT기기 가격 상승, 수요 감소로 對美 수출 감소 전망(산업研)
❹ 이차전지	47.2%	■ 우리나라는 對美 배터리 소재 수출 1위 국가로서, 미국 내 가격인상 및 수요위축 우려(신한증권)
❺ 디스플레이	0.6% (對베트남 수출비중 : 60%)	■ 최종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높은 관세(46%)로 부정적 영향(IBK研)
❻ 전기전자	가전 48.5% 무선통신기기 7.9%	■ 베트남(46%) 등 주요생산기지 고율 관세로 부정적 영향(신한증권) ■ 가전은 멕시코 USMCA 관세 제외로 멕시코 생산 확대에 대응 가능성

Ⅲ. 향후 정책방향

- ◇ 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,
 -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①기업부담을 경감하고 ②수출 다변화와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적응을 지원
 - ④국내 생산·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 지원 병행
- ◇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적극 강구

1 수출기업 피해 지원

- **(정보제공)** 관세대응 상담창구* 및 전국릴레이 상담회**를 통해 美 관세동향 및 기업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 산업부·중기부 등
 - * (KOTRA) 통합 상담 (중기부) 中企 관세상담 (관세청) 전국세관 22곳 공익관세사 배치 등
 - ** (강원) 3.12, (서울) 3.27, 5월초, (경기) 4.2, 4.9, (충청) 4.3, 4.11, (전라) 4.7, (경상) 4.15
- **(수출바우처)** 기업의 피해분석·분쟁해결·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(+1,000억원 이상) 산업부·중기부
- **(금융지원)**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*
 - * 자동차·부품 대상 2조원 추가 지원(4.9일), 그외 업종은 분야별 대책을 통해 발표
 - ※ 주요 금융기관도 피해업종·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총 25조원+α 금융지원 발표(4.7)
: [KB] 8조원 [신한] 10.5조원 [하나] 6.3조원 등
- 기은·수은* 등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 신설 기재부·금융위
 - * 4.11(금)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내용 발표
-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설 금융위
-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(25년 2,500억원) 지원 확대 중기부
- **(세정지원)** 피해기업의 조세납부 및 세무·관세조사 부담 한시완화 국세청·관세청
 - * 기업 신청시 법인·부가·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및 관세 최대 1년 연장 지원
- **(수요보강)** 전기차 보조금 확대 환경부,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 (5→8.5%, ~25.6) 추가 지원 검토 기재부 등 수요충격 보완을 위한 조치 강구

2 수출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

- **(판로개척)** 대체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개척·현지진출 지원 강화
 - 글로벌 사우스 등 저변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* 및 30대 수출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주요국 수출플랫폼** 구성·운영 산업부·중기부 등
 - * K-박람회 개최지 확대(유럽+아시아 → 남미 권역), 해외전시회내 통합한국관 운영 확대(170→200회)
 - ** 무역관·협회·국표원·연구기관 등으로 구성, 기업매칭·비관세장벽 대응·현지수주 등 지원
- 수출초기 단계에 필요한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(25년 600억원) 중기부
- **(물류지원)**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상향(3→4천만원) 산업부·중기부, 해외 거점물류센터 신속 확보* 및 중소기업 전용선박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산업부·해수부 등
 - *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(283→310개), 인도·남미지역 통합물류센터 신속 확보
 - ** (現) 미주·구주·동남아 항로 → (改) 중동·남미 등 항로 수요조사 후 지원 확대 검토
- **(FTA 확대)**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통상 협정을 조속히 진행하고, 既타결된 협정* 조기발효 추진(연내 목표) 외교부·산업부
 - * (UAE) 관세 5% 10년 내 철폐 (에콰도르) 승용차·화물차 관세 최대 40% 15년 내 철폐 등
- FTA 수출컨설팅(FTA 종합지원센터)시 최근 발효된 FTA 국가는 원산지 교육, 일일 현장방문 컨설팅 확대 등 조기진출 지원 산업부
- **(무역금융)**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 -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(수은) 및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(중진공) 지원 확대 기재부·중기부
 -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(신·기보) 및 既지원 중인 온렌딩 프로그램*(산은)의 지원규모 확대 금융위·중기부
 - *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은에서 자금을 저리로 전대받아 중소·중견기업에 지원

3 산업경쟁력 강화

- **(R&D)** 통상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R&D 투자 대폭 확대 추진 기재부·과기부
 - R&D 예타 폐지*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 가속화 과기부
 - * 「국가재정법」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개정을 추진(25년 목표)하고, 법 개정전이라도 예타 면제 등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국가전략분야 R&D 조기 착수 지원
 - 관계부처 협의·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 기술들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*로 추가 지정 검토 기재부
 - * 국가전략기술은 R&D·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 적용
- **(금융)** ①관세피해 지원, ②산업경쟁력 강화, ③공급망 재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정책자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
 - (첨단전략산업기금)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분 투자·대출·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금융위
 - 「산업은행법」 개정안(3.27 발의)·정부 보증동의안(4.2 국회 제출)의 신속 통과 및 연내 가동 추진
 - (공급망안정화기금) 美 관세부과 등으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한 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지원 기재부
 - 핵심 소재·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구매·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
- **(인프라)**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대응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강화
 - (반도체) 「반도체특별법*」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, 전력·용수·도로 등 클러스터 인프라 신속한 구축 지원
 - * 반도체클러스터 내 전력·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·운영 지원 등 포함
 -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(총 1.8조원) 지원 계획 (기업부담분 50% 이상 지원) 구체화 기재부·산업부

- (에너지)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3법 시행령* 적기 제정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 지원 [산업부]

*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인허가의제, 신속처리특례, 갈등조정 규정 시행 근거 마련

4 국내 생산 · 고용 영향 최소화

- (유턴·외투 지원) 첨단·공급망 산업 육성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·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 강화 [기재부·산업부]

- 유턴투자 보조금(現 1,045억원) 확대,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등 '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' 마련·추진(5월중, 잠정)

- 외투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*, 관세·개소세·부가세 감면기간 확대(최대 7년)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

* +5~20%p씩 항구적 상향 및 최대 75%까지 +10~25%p 추가 상향('25년 한시)

- (위기지역 지정)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·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산업·고용위기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원

- **완화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***(‘24.12월 발표)을 바탕으로 지역 경기침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신청 시 적극 검토 [산업부]

* 기업 이전·구조조정 계획 고려 등 정성지표 구체화 및 전국 생산지수 대신 지역 생산량 변동 등 지역에 특화된 정량지표 활용 등

- 급격한 고용감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고용 위기 확산 시 **고용위기지역 지정*** 신속 검토 및 적시지원 실시 [고용부]

* 지정기준 : (정량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, 사업장 수,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등 (정성) 고용산업구조 등 종합적 고려 또는 급격한 고용감소 확실시되는 경우

산업·고용위기지역 주요지원(예시)

지역	지원내용
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지역기업)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자격 자동 인정 ▪ (이전기업) 입지·설비투자비의 12~50%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
고용위기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지역기업)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(휴업·휴직수당의 2/3 → 90%) 및 1일 한도금액 상향(6.6 → 7만원), 지역주민 고용 시 임금 1년간 50% 지원 ▪ (지역 근로자)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(年 1 → 2천만원),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(최대 5 → 8년) 및 한도액 상향(자녀학자금 5 → 7백만원)

IV. 주요 산업별 대응방향

◇ 美 관세부과의 주요 산업·기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, 첨단·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방안 지속 마련

- **(자동차)** 美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(4.3 발효)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, 업계 피해 최소화 및 생산기반 유지·확충 지원
 - 「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」 발표(4.9) **산업부**
 - ①관세 피해기업 경영안정, ②수요충격 대응, ③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, ④美 관세조치 협상 대응 강화 등 중점 지원
- **(반도체)** 패권경쟁 주도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, 美 반도체 관세 부과 추가 대응방안 마련
 - ①인프라, ②투자, ③R&D, ④인력양성 등 반도체 재정지원 강화
 - 美 반도체 관세부과 시행시, 「^{가칭}美 관세대응 반도체산업 대응방안」 신속히 마련·발표 **산업부**
- **(AI)** AI G3 도약을 위해 인프라, 모델·인재, 산업화 집중 지원
 - 첨단GPU 신속 확보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 조기 개시,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「AI기본법」 시행령 제정(~25.3분기)
 -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*, 글로벌 AI 핵심인재 유치 등 「국가AI역량 강화방안」 후속조치 마련(4월) **과기부**
 - * AI 국가대표팀을 구성해 GPU, 데이터 등 집중 지원 → 세계 최고수준 AI 모델 개발
- **(바이오)**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바이오 전분야 지원을 강화하고,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크에 선제 대응
 - 미국 현지 진출기업 지원* 확대, 바이오시밀러·신약개발 지원** 등을 통해 의약품 관세부과 리스크에 선제적·전략적 대응
 - * 美 내 한국계 기업-美 진출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, 공동R&D 및 외국 투자유치 지원 등
 - ** ① 국가신약개발사업(‘21~’30년, 총사업비 2.2조원), ② 바이오·백신편드(‘27년까지 1조원 조성) 등
 -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분야 R&D 투자계획, 규제개선 방향 등 마련(5월) **바이오중**

□ **(이차전지)** 투자 촉진, 배터리 순환 이용 등 산업생태계 강화

- 정책금융(대출·보증·투자) 지원 확대*,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통한 세제지원 강화, 초격차 기술 R&D 확대**

* '24년 5.9조원 → '25년 7.9조원(산은 6.8조, 기은 0.6조, 신보 0.3조, 기보 0.2조)

** 배터리 수요처 다변화를 위한 실증지원(방산·항공·기계·조선·로봇 등), 차세대(전고체 등) 이차전지, 리튬계 및 비리튬계 소재·셀 기술, 재사용 등

- 재활용 원료(폐배터리 등) 공급망 안정화, 재생원료 인증 및 비축사업 추진 등 「배터리 순환이용 종합대책」 마련(4월) **환경부**

□ **(철강)** 통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, 저탄소·고부가 전환 지원

- ①美 관세 부과 등 통상 갈등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, ②불공정 수입재 대응*, ③안정적 수요 창출 지원(3.19 발표)

*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을 우회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포함 등

- 고부가·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철강산업 고도화 방안」 연내 마련·발표 **산업부**

□ **(조선)** 미국 MRO 등 신수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한미 협력 강화, 중소형 조선사 금융지원을 통한 수주 확대 추진

- 양국 간 협의를 통해 美 함정 MRO 확대, 조선소 생산성 개선 등을 포함한 韓-美 조선 협력 방안 구체화

- 선박수주 호조 등 기회요인 활용을 위해 「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」 마련(4.9), 핵심부품 국산화 등 「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」 마련 **산업부**

□ **(석유화학)** ①공급과잉 설비 합리화, ②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, ③고부가가치화 등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

- 투자·고용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되는 지역*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

* 전남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('25.3월)

- 업계 자유킨설팅을 거쳐 「석화산업 사업재편 지원방향」 마련 **산업부**